

민법(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)
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·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(法源)이 될 수 있다.
- ②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.
- ③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·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.
-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(法源)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중종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.

2.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-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,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- ④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.
-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,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
3.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.
- ③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,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.

4.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.
-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,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.

5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.
- ②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.
- ③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.
- ④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.

6.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ㄴ.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ㄷ.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ㄴ ③ ㄱ, ㄴ ④ ㄱ, ㄷ ⑤ ㄴ, ㄷ

7.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
-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-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-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.
-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.

8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-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.
- ③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.
-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,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.
- ⑤ ‘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’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‘처분’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.

9.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.
-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.
-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-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.
-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.

10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,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③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.
-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.
-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
11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.
- ③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.
-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.

12.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.
-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.
-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,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.
-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.
-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.

13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②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,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.
-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·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,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·경솔·무경험은 추정된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4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.
-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.
-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.
- ④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15.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
- ㄴ.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
- ㄷ.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ㄱ, ㄷ ⑤ ㄴ, ㄷ

16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,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·증명책임을 부담한다.
-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.
-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.
- ⑤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,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.

17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
- ㄴ.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
- ㄷ.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·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18.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,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.
-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④ 시기(始期)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19.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,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, 착오나 사기·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.
- ④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.

20.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
-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
-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
-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계를 하는 경우
-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
21.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
- ② 기간의 초일(初日)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.
- ③ 기간을 시, 분,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.
- ④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(曆)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⑤ 기간을 일, 주,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(零)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.

22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,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.
- ②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,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.
-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,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,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.
-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.

23.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?

-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
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④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
⑤ 연예인의 임금채권

24.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,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登記請求權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- ㄴ.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·수익하고 있으나,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- ㄷ.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,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
- ① $\neg$ ② $\perp$ ③ $\neg, \perp$ ④ $\perp, \perp$ ⑤ $\neg, \perp, \perp$

25.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,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③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④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,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.
-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,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.

행정법

26. 행정법의 법원(法源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
-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

27.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.
- ②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,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③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,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.
- ④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.
- 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.

28.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「건축법」상 건축신고
- ②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
- ③ 「수산업법」상 어업의 신고
- ④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
- ⑤ 「식품위생법상」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

29.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.
-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.
- ③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·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.
- ④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.
-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재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재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.

30.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,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.
- ②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.
- ③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.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.
- ⑤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31.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.
- ②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.
- ③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.
-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.
- 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.

32.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
- ② 공유수면매립면허
- ③ 보세구역의 설영특허
- ④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
-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

33.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.
- ②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.
- ③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,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「행정절차법」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.
- 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,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.

34.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 합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.
- ②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.
-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.
- ④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.
- ⑤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될 수 있다.

35.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「행정절차법」이 우선한다.
- ②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.
-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.
- ④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.
- ⑤ 「행정절차법」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
36.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?

-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
-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
- ④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
-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

37.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.
- ㄴ. 「행정대집행법」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.
- ㄷ.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.
- ㄹ.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.

- ① $\neg$
② $\perp, \top$
③ $\neg, \perp, \top$
④ $\perp, \top, \neg$
⑤ $\neg, \perp, \top, \neg$

**3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**

-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.
-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 있다.
- 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.

39.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- 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- ③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.
- ④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.
- ⑤ 법령으로 정한 ‘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’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40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.
-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.

41.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.
- ②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
- ④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,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.
- ⑤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.

42.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
- ㄴ.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
- ㄷ.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
- ㄹ.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43.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.
- ②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.
- ③ 생명·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.
-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.
-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「국가배상법」이 적용된다.

44.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.
- ③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(自有公物)이라고 한다.
- ④ 경찰건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.
- ⑤ 도로,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.

45.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.
- ㄴ.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.
- ㄷ.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.
- ㄹ.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ㄱ
- ② ㄴ, ㄷ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
46.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.
- ②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.
- ③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·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.
- ⑤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,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.

47.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.
-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.
- ③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.
-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.
- 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.

48.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?

-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.
-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,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.
- ④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.
- 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.

49.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.
- 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.
- ③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소송의 계속(繫屬)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
- 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50.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.
-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.
- ④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.
-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행정학개론(지방자치행정 포함)

51.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.
-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.
-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, 주민참여는 ‘풀뿌리 민주주의’ 원리를 구현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.
-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.

52.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?

-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
④ 명시이월비 ⑤ 국가결산보고서

53.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?

- ① 정무직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
③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④ 4급 이상 공무원
⑤ 5급 이하 공무원

54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, 특별자치시와 시·군·구(자치구)가 포함된다.
-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별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.
-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.
- ⑤ 특별시·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.

55.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 A씨(30세)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.
- ② ○○시 주민 B씨(20세)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○○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(45세)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,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○○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○○시 주민 D씨(55세)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○○시 주민 E씨(57세)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,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.

56.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제도주의론은 공식적 제도나 구조는 물론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요하게 강조한다.
- ② 행태주의 행정연구는 가치와 사실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체제이론은 행정현상을 여러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.
-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한다.
- ⑤ 신행정학 이론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.

57.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.
- ㄴ.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.
- ㄷ.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.
- ㄹ.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58.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?

-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- ④ 조정교부금 ⑤ 국고부담금

59.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협으로 진행될 수 있다.
-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.
-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.
-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.

60.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
- ㄴ.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
- ㄷ.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
- ㄹ.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61.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·경직적 조직문화를 갖는데 비해 학습조직은 적응적 조직문화를 갖는다.
-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·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.
- ③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협력을 중시한다.
- ④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구조이나 학습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.
- ⑤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는 반면에 학습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공유된다.

62.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.
-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책임자를 인선한다.
- ③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.
- ④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.
- 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.

63.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.
-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.
-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.
-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.

64.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.
-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.
-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.
- ④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.
-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.

65. 정부조직체계에서 청 단위기관과 소속부처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기상청 - 환경부	ㄴ. 방위사업청 - 산업통상자원부
ㄷ. 소방청 - 행정안전부	ㄹ. 특허청 - 기획재정부
ㅁ. 해양경찰청 - 국방부	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 ④ ㄴ, ㅁ ⑤ ㄷ, ㅁ

66.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·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.
-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.
- ③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.
-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.
- 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.

67.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②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
-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
-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

68.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.
-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.
-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.
- ⑤ 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.

69.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,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.
- ②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.
-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.
- ④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다.
- ⑤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.

70.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이익집단 ② 입법부 ③ 정당 ④ 시민단체 ⑤ 민간전문가

71.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.
-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·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·차량·선박·항공기·건물·토지·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(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)와 사적 접촉(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)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72.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·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ㄱ.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| ㄴ.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|
| ㄷ.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| ㄹ.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|
| ㅁ.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| ㅂ. 가치갈등 해소 |

- ① ㄱ, ㄴ, ㄹ ② ㄱ, ㄷ, ㅂ ③ ㄴ, ㄷ, ㅁ ④ ㄴ, ㄹ, ㅁ ⑤ ㄷ, ㅁ, ㅂ

73.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체계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다.
 ② 분권화 수준의 개선, 권한배분의 개편, 명령계통의 수정, 작업집단의 설계 등을 추진한다.
 ③ 주된 목표는 기능중복의 제거 및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.
 ④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조직계층의 단순화, 명령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.
 ⑤ 공무원의 의식개혁,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.

74.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?

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,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.

-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
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

75.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?

- ①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,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.
 ②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.
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,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,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.
 ④ 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.
 ⑤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.